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출 강력저지 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444
----------	-----

발의년월일 : 1997. 2. 6.

발의자 : 김대식 의원
외 5인

□제안이유

-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수출 계획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남북한을 파국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반인륜적
패륜행위 일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자국내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 북한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귀중한 인류의 생명을 파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한민족의 국제적 자존심 추락은 물론 한반도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되어 자자손손 후세에 돌이킬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금수강산 한반도가 국제 핵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하게 될것임.
- 이러한 국가적 중대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대만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조치와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핵폐기물 반입을 스스로 철회
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려 줄것을 촉구 하고자 함.

□주요골자

- 내 용 : '건의서 참조'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출 강력저지 촉구 건의서

우리 충주시의회의원 일동은 대만 당국에서 북한에 핵폐기물을 반출하려는 반인륜적 행태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바라며, 22만 충주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대만이 핵폐기물을 북한에 반출 하려는 계획은 한반도 전체의 심각한 위협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반인륜적 패륜행위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국 내에서 발생된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금수강산 한반도를 파괴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중대 문제에 관하여,
1996년도말 대만과 북한간 핵폐기물 반출에 관한 비밀계약 체결을 인지 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대만이 핵폐기물 반출을 강행하려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보도를 접하고, 대만의 핵폐기물 반출 저지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할때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대만의 핵폐기물 수출에 항의해온 한국 환경운동가들이 대만에서 평화적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우익 테러집단으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급기야 추방되는 사태까지 있었고, 세계 환경운동 조직인 그린피스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저지 운동에 나선 마당에 대만당국은 여전히 오만한 자세로 핵폐기물 반출 강행을 고수하면서

반출시기를 앞당길 기미까지 보이고 있음을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을 뿐아니라, 심각한 경제난으로 원시적 처리 방법인 폐광에 매립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 한반도가 방사능 오염이라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 할 것은 명약관하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충주지역에서는 국가적 중대사와 관련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환경운동가, 주부, 성직자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핵폐기물 북한반출 반대를 위해 민간 사절단을 대만에 파견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인 한반도가 국제 핵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만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외교적 조치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염원하면서 충주시의회의원 30명 모두는 22만 충주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2.

충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